

###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21년 3월 5일
- 제 안 자 : 박갑상, 김대현, 황순자, 임태상, 배지숙, 김동식, 이진련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3월 9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년 3월 22일) :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갑상 의원)

### ☐ 제안이유

- 정부의 규제 개선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안 제8조, 안 제9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할 경우 계획(안)을 첨부파일로 공개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대상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그 공고·열람방법을 기존 방법에 추가하여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게시 등 다양한 수단의 활용을 허용함

- 도시관리계획안 재공고·열람도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이 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사전자문 등 계획조정기능 강화(안 제17조)

- 고층의 일반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 여건변화 반영 등(안 제84조의2, 안 제84조의4)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기존 용적률 완화에 추가하여 건폐율도 완화함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진성)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시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 편의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 ○ 안 제8조 (주민의견 청취)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할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 도면 등을 첨부파일로 공개토록 하며,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안 시 의견청취 대상을 기존 토지소유자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의견청취 방법도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게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정보 접근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 안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으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 재공고·열람 기준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여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의 용어를 정비함

## ○ 안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는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지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 안 제84조의2(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및 제84조의4(연구개발 특구 안에서의 용적률 등) 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자 지역 투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용적률 완화 규정에 건폐율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토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촉진과 연구시설용지 분양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기타사항으로 조문 오기를 정비하였음.

\* 도·시군계획조례 → 도시·군계획조례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것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도시관리계획을 공개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책은?		○	현행 법령상 이미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 중 위치도 등 열람장소에서 직접 열람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